친명은 중징계, 친청은 반발… 최민희 징계 두고 민주당 내홍

친청계 "징계 대상은 김민석" 주장
친명계, 제명 포함 중징계 촉구
내일 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사이 입장도 극명하게 나뉘는 가운데, 오는 27일 당 윤리심판원 심의가 당내 통합과 분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청계는 당 윤리심판원의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이틀 앞둔 25일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심의의 부당함을 당원과 지지자에게 호소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역구 당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사진·영상 기자들에게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했다가 구설에 올랐고, 지역구 당원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녹취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청와대가 최 최고위원의 발언을 부인하고 유감을 표한 가운데, 김민석 대표는 지난 12일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김 대표는 감찰 지시 3일 뒤인 15일에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당 윤리심판원에 이첩을 지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최 최고위원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감찰 사흘 만에 윤리심판원에 이첩해 빛의 속도로 심의 날짜를 잡았고 그보다 먼저 접수한 당 대표 징계 청원은 심의를 언제 할 지도 모른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도 여러 건 윤리심판원에 접수돼 있다고 한다. 유독 최 최고위원만 콕 집어서 쫓기듯 징계 심의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친청계는 문제가 된 최 최고위원의 이 대통령 관련 발언은 본인 스스로 수 차례 사과했고, 반·분·신(反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의혹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킨 김 대표가 징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심의에 앞서 당 대표 징계 심의에 먼저 착수해야 공정과 형평, 민주주의에 맞는 일"이라고 했다.

최 최고위원의 지역구(경기 남양주갑) 일부 당원들은 문제가 된 비공개 당원 간담회 당시 발언 맥락이 담긴 서류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당수 초선 의원과 친명 원외조직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며, 최민희 최고위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내 친명 성향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 최고위원을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처분할 수 있다. 최고 수준인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 징계받으면 차기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청계 및 친청계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원자격정지 징계의 경우 최고위원직도 내려놔야 하고 차기 총선에서 경선 득표수에서 15% 감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최 최고위원은 올해 2월 딸 축의금 관련 의혹으로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김 대표 취임 이후 신천지 의혹과 최 최고위원 징계 추진으로 당내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기는 힘들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최근 당내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모여 회동한 결과 최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중국 전기차 공세 속 국산차 지원 '제자리'

내년도 세제개편안서 전기차 빠져
여야,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법안 발의
재경위는 '통상 이슈' 우려로 난색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국내 생산세액공제' 포함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조세재정소위에서 여야와 정부가 논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재정경제부는 국산 전기차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 세제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는 국가 경제와 안보상 중요성이 큰 전략산업인 태양광 발전·풍력 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개 산업을 대상으로 실제 국내에서 이뤄진 생산에 연동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다. 전기차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중국 전기차의 거센 추격을 우려하며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경기 고양시에서 개최된 '하이록스 서울 2026'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 BYD의 모습. /BYD

실제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와 BYD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엔 1.1%에 그쳤던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지난해 33.9%까지 급증했다. 반면 1~9월 전기차(승용차) 중 국산 비중은 48.7%로 절반을 밑돌았다.

게다가 지난 9월엔 수입 전기차(1만8181대)가 국산차(1만3587대)를 앞질렀다. 지난해 국내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 BYD는 올해 1~10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록 기준 2만731대를 판매하며 누적 판매량 기준 수입차 브랜드 4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단 평가를 받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배터리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전기차의 부상에 국내 전기차 업계에 위기감이 드리우면서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1대 당 최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태홍 기자

김민석, 조희대 탄핵 위한 '5당 연대' 제안

민주당, 진보4당과 공동 대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신속 추진을 위한 5당 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빛의 혁명을 이뤄왔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저지 2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완전한 내란 청산 결의를 모으고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의 시대적 소명을 높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도 12·3 국민 주권의 날로 삼아 12·3 내란에 항거한 국민의 뜻을 기리는 기념일로 지정한 만큼, 그 주역들이 한 데 모여 조희대 사법부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 독립을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한 5당 연대를 필두로 시민사회와 연대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진보4당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인 탄핵 소추 시기 등을 놓고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놓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몇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각 정당들이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주장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李 "공공임대, 중산층도 선택하도록"

은평 공적주택 현장 간담회
매년 평균 24만호 공적주택 공급
좁고 외진 임대주택 인식 탈피 의지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5일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 주거 지원 수단에서 중산층도 골라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평균 24만호 규모의 공적주택을 공급해 불안해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공공임대' 대신 '공적주택'이라는 이름을 내건 것도 외진 곳의 좁은 '영세민 주택'이라는 인식을 걷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공적주택, 모두의 주거사다리'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은평구의 신축 공적주택 단지를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외진 곳, 좁은 면적, 또는 주거 지원을 받아야 되는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라며 "공공임대주택 하면 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을 저는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매입한 것이든, 아니면 공적 영역에서 제공돼서 임차한 것이든 그런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하나의 선택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위치나 면적 또는 품질 측면에서 중산층들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또는 주거 사다리로서의 선택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적임대주택'이라고 명칭을 바꾼 데 대해서는 "요즘은 안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영세민 주택'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선택지로서 누구나 자기를 구입하기 전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적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해 평균 24만호 정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해도 50%가 확대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비중도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공급 공백을 재차 짚으며 "사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허가도, 착공도 대폭 줄어들었고, 이게 한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오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이 좀 불안정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향해 "최대한 속도를 내서 물량을 확대 공급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 주택 공급이 투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대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새로운 주택 공급이 새로운 주택 투기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없지 않은데,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대비도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택의 자산 증식 수단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집은 원래 행복한 보금자리여야 되는데,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중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좀 왜곡된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주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공공 영역의 주택들이 완충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전매트·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적주택을 최대한 공급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 기자